

세계 초고속정보통신망(GII)의 국제적 함의

추 광 영*

〈목 차〉	
I. 序論	V. 文化的 從屬
II. GII의 技術的 概要	VI. 第3世界的 딜레마
III. 各國別 立場과 推進現況	VII. 結論
IV. GII의 國際的 含意	

I. 序 論

정보화사회를 향한 인류의 질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발명된 지가 올해로 50년이고 정보화사회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불과 8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다. 그러던 것이 1994년 3월 고어(Gore) 미국 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ITU 제1차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전지구적 정보통신망인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제안한 뒤(IITF, 1994: 1) 세계는 이제 GII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GII는 세계 각국에서 계획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을 확대하여 전지구적 규모의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단위의 정보화사회는 대용량 광대역 ISDN의 구축으로 귀결된다. ISDN은 “사회의 각 부문을 근거리 통신망(LAN), 대도시 통신망(MAN) 등 광섬유 케이블 등의 광대역 통신망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ISDN에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구축돼 있는 전화, 전신, 데이터, 팩시밀리, 유선방송 등 각종 정보통신망들이 하나의 통합된 망으로 융합되어 음성, 데이터, 영상의 구분없이 각종 신호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제공된다”(졸고, 1993: 41-42).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ISDN이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고어가 1993년 9월 미국의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추진을 공언하고부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GII는 단순히 ISDN이 통합된 초고속 대용량의 물리적 네트워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II는 물리적 네트워크는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광범위한 응용서비스의 구현을 포괄한다. GII는 전지구적 차원의 정보화사회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어는 GII가 인류의 모든 가정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하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제성장과 강한 민주주의, 보다 나은 환경보존, 개선된 보건, 그리고 우리 자그마한 지구에 대한 커다란 연대책임감을 가져다 줄 것”(<Financial Times> 1994. 9. 19; 박태경, 1995: 220-221에서 재인용)이라고 말했다.

GII와 그 토대인 ISDN은 모두 선진국들이 앞장서 계획,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등 선발중진국을 필두로 제3세계에서도 그 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1993년 말 시범적 협대역 ISDN인 ‘하나로망’을 개통한데 이어 1994년 4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까지 모두 45조원을 투자해 공공기관과 도서관, 연구소, 대학 등과 기업 및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각종 정보를 즉각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성재, 1995).

우리나라가 전지구적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인터넷 등의 첨단 정보기술을 직접 이용하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각종 정보화사회 추진 계획이나 기업의 홍보, 또는 신문 지면 등 정보화사회에 관한 각종 담론에서 오히려 더 잘 실감할 수 있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저마다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신문지면의 많은 부분이 정보화社会의 기반인 컴퓨터와 뉴미디어에 고정적으로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 관한 담론들은 대부분 정보화社会의 기술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미빛 미래만을 논의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함의나 부작용 등에 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GII에 관해서는 아예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도 대체로 마찬가지로 지적된다.

그러나 GII는 첨단 정보기술의 총화이기 이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결정의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Vincent, 1995). 따라서 GII의 함의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함의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특히 제3세

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ISDN 등 종전까지의 정보화사회 구축이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내적 문제였다면 GII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만큼 문제는 더 복합적인 것이며 국제적 정치경제학의 현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GII의 기술적 기반과 주요국가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GII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예상되는 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GII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해 가지는 합의의 일단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하였다.

Ⅱ. GII의 技術的 概要

1994년 3월 고어가 GII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7월 나폴리 G7 정상회담에서도 이의 구축을 위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GII의 물리적 실체는 아직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의 경제 논리, 국가간의 통신망 표준화 및 네트워킹 방법 협상 등의 보다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GII는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지상의 광케이블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위성통신망이 그 기반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두가지 기술이 적정한 비율로 혼재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외에도 GII를 구성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겨우 구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그 정확한 실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GII는 한마디로 1 Tbps(1초당 1조 비트) 이상의 초고속 디지털통신이 가능한 대용량의 광케이블망을 국가간에 상호접속하여 전지구적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56-64 Kbps의 전화망을 모두 적어도 Gbps 수준의 광케이블로 대체하고 국가간에는 Tbps 수준의 망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이다.

1. 技術的 基盤

GII 주창자들은 모두 전세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의 정보도 즉시 얻을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GII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 교육, 연구, 문화, 레져 활동 등을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러한 GII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적으로 광섬유, 디지털화,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박태경, 1995: 21-24).

GII에 필요한 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은 광섬유가 개발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광섬유는 1970년 미국의 코닝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실용화가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40가닥이 모여 이루어진 광섬유 케이블은 오늘날 130만 회선의 전화와 1,920개의 TV채널을 일시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만 5,000개의 전화회선과 22개의 TV채널을 전송하던 종전의 마이크로웨이브 성능보다 거의 100배나 확장된 것이다.

GII의 핵심 기반은 디지털혁명이다. 모든 영상, 음향, 그림, 문자를 0과 1이라는 두개의 숫자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것을 가능케한 디지털혁명으로 한가닥의 가느다란 광섬유 전화회선을 통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32권 분량과 맞먹는 방대한 정보를 단 1초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이들 서로 다른 속성의 정보들이 융합될 수 있었다.

첨단반도체와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멀티미디어 혁명도 GII 구축을 가능케한 정보혁명이다. 반도체의 경우 256M DRAM에 이어 1G급 DRAM도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 반도체의 개발로 화상전화,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컴퓨터는 현재 초당 100만 비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가비트급이 대중화되어 있으며 조만간 초당 10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가비트 컴퓨터가 출현할 전망이다.

그런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음성, 비디오,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서로 다른 통신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대용량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초고속 교환기술인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술이 필요하다. ATM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교환기 및 접속장치의 일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양한 통신망인 광케이블,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고속으로 연결해 GII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ATM은 필수적이다. ATM은 GII 기간망의 핵심기술이라고 하겠다(이재용, 1995).

GII는 디지털 기술과 광섬유 케이블 등에 의해 전달되는 음성, 화상, 정보 등을 ATM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교환하는 국제통신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Vincent, 1995: 352).

2. 國際的 論議

이같은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1994년 3월 2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고어가 제시한 GII 추진 5원칙은 다음과 같다(한국전산원, 1994: 23-24).

- ① 민간투자를 장려한다.
- ② 경쟁을 촉진한다.
- ③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허용한다.
- ④ 기술 및 시장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규제조건을 완화한다.
- ⑤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한다.

미국이 GII 구상을 발표한 직후인 1994년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20차 G7 정상회담에서 GII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G7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이 합의의 내용에는 각종 기기 및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국립도서관의 목록 제작,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상호추진이 포함되어 있다(이인규 이희규, 1995: 340). 한편 이같은 합의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이를 논의할 GII 추진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G7 정상회담 직후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때인 1994년 9월에 전세계 49개국 전기통신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전기통신각료회의가 ITU전권위원회 회의와 함께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고어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의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GII 구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교토회의에서는 GII 구축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GII 구축과 세계적 차원의 협력 및 제휴 강화를 위한 교토선언이 채택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통신정책동향〉 1994년 22호: 57-58).

- 전기통신의 고도화가 이미 전세계에 개시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규모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모든 사람들이 전기통신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개발 면에서 격차를 시정하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
- 본 회합의 성과를 감안하여 지역 또는 세계 차원에서 협력과 제휴를 강화한다.
- 전기통신은 다가오는 세기에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GII에 대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GII의 본격적인 구축 시도가 정보통신기반이 앞서 있는 서방 7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폴리 G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995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G7 정보통신 각료회의는 GII 구축을 위한 8대 원칙을 확정하고 11개의 GII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브뤼셀 회담에서 합의된 GII 8대 원칙은 고어가 제시한 5대 원칙에 프랑스 등이 제시한 3개 원칙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3개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정보내용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보장” “개발도상국을 배려한 전세계적 협력의 필요성 인식” 이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GII 구축과 관련해 주요 주제별로도 여러가지 사항이 합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한편 브뤼셀 회담에서는 GII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11개의 GII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보화동향> 1995. 3. 20).

<표 1> 브뤼셀 G7 정보통신 각료회담 주제별 합의사항

주 제	논 의 내 용	합 의 사 항
시민을 위한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와 인력개발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서비스 및 기회균등 제공 — 정보화사회와 고용과의 관계 연구 — 정보내용의 다양성을 통한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지원 — 민간주도의 정보통신망 구축 및 신규 정보관련 서비스의 개발 장려 — 교육, 훈련제도 개발
규제체제적 접근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체제의 조화를 목표로 하며 이의 촉진 수단으로 공정 경쟁, 시장 개방, 보편적 접근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장내의 시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전세계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시장 개방 —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개방 접근 허용 — 각종 인가 및 주파수 할당제도에 투명성 보장 —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전략적 제휴 허용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정보보호 없이 시민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과 지적 재산권의 인정 없이는 다양한 정보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정보보안 강화 — 지적 재산권 보호

- ① 정보사회관련 정보 DB 구축(간사국 : EU, 일본)
- ② 광대역 정보통신망의 전세계적 상호운용(간사국 :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 ③ 다문화적 교육 훈련(간사국 : 프랑스, 독일)
- ④ 전자도서관(간사국 : 일본, 프랑스)
- ⑤ 전자박물관 및 미술관(간사국 : 이탈리아, 프랑스)
- ⑥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간사국 : 미국)
- ⑦ 전세계적 재해 관리(간사국 : 캐나다)
- ⑧ 전세계적 의료응용 서비스(간사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⑨ 전자정부(간사국 : 영국, 캐나다)
- ⑩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정보교환(EDI)(간사국 : EU, 일본, 미국)
- ⑪ 해상정보시스템(간사국 : EU, 캐나다)

브뤼셀 회담에서 또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G7 국가의 정보통신분야 다국적기업이 중심이 된 민간차원의 세계정보통신기반위원회(GIIC: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ttee)가 발족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형 정보처리회사인 EDS,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마쓰시타상사 총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미국의 애플컴퓨터, AT&T,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TT와 NEC 총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GIIC는 정부차원과는 별도로 GII 구축을 위한 4대 사업을 3년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4대 사업은 ① 민간주도로 GII를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각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상에 대한 협력, ③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강연, 연구활동 및 정책제언, ④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GII 이용실험이다(박태경, 1995: 226).

G7의 정보통신기업이 GIIC를 창설한 것은 기술표준화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정보고속도로 구축시 기술과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초 GII 구상이 처음 발표된 이후 GII는 G7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들간의 상호이해가 조정되는 가운데 국가간 협상을 통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GII의 기술적 토대는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움직임 이외에 기술의 사회적 이용 형태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가간 이해다툼이 물밑에서 치열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기술적 표준 등이 확정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GII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各國別 立場과 推進現況

앞에서 보았듯이 GII 구축이 G7 국가들간에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들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를 비롯한 EU국가들이나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우위와 주도권 행사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견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뤼셀 회담에서도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이나 미국이 GII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위성사업(Low Earth Orbit: LEO)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드러나는 등(〈정보화동향〉 1995. 3. 20) 이들 나라 사이의 갈등은 곳곳에서 노출된다. GII는 ISDN과 달리 일국내 문제가 아니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간 사업임을 상기하면 국가간 견제와 대응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가 쉽게 이해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내 GII 기반 건설 뿐만 아니라 저마다 독자적인 GII 구축계획을 수립해 GI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美國

GII 구축을 최초로 제안한 미국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국제기구와 세계 언론 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GII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으며 GII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내외 통신사업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통령 고어가 직접 전세계를 상대로 GII 선전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ITU,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GII 구축시 미국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WTO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과의 쌍무 통신협상을 통해서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GII는 21세기 뉴딜정책으로 일컬어지는 NII 구축사업과 동일한 원칙하에 이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NII는 곧 GII의 미국내 기반이다. 1993년 9월에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21세기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기반(NII)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NII: Agenda for Action)은 21세기 미국의 청사진으로까지 지칭된다.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2015년까지 1,000억 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해 통신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나로 접속하는 광통신망을 미전역에 구축하는 것이다(박태건, 1995: 62). 미국은 이를 민간주도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방송 통신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 교육분야 등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NII와 GII를 구축하는데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나 응용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활용 형태다. 이에 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그리고 시장개방이다. 미국은 '정보통신의 자유화 정책'을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법, 제도적 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96년 2월, 61년만에 통신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통신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전화와 장거리전화, 통신과 방송, 컴퓨터회사 등 사이의 사업영역을 분리하는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전화회사와 케이블TV 운영업자, 전기회사 등 정보기술 관련 사업자가 모든 통신산업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다(〈한국일보〉 1996. 2. 3).

또한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세계기술표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각국이 자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마다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업전개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향후 GII의 주도권을 쥘기 위해 보유기술을 국제기술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표준화기구인 미국립표준연구소(ANSI)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보고속도로의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기술 표준분야를 파악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전자신문〉 1995. 3. 31).

이밖에도 미국은 GII의 선진국 주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개발도상국에 GII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들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민영화하도록 설득하고 GII에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4: 206).

2. EU

유럽지역은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탄생한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유럽에는 범유럽차원에서 일찌기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인 범 유럽 네트워크(Trans-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s: TEN)가 추진되고 있었다. EU는 여기에 미래사회의 기반 개념을 추가한 EII 구상을 1993년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EII는 TEN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정보통신망의 기반은 바로 TEN이라고 하겠다(김성규, 1995).

TEN의 건설에는 2000년까지 최소한 670억 ECU(약 65조 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EU는 이를 통해 유럽의 고용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3년 6월 EU 각료이사회는 유럽판 정보기반구조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CIA(Common Information Area)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에서는 역내의 고속통신 및 광케이블망의 접속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EU는 CIA 구상을 TEN과 결부시켜 경제 사회 기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유럽정보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94년 11월에 개최된 EU 각료이사회에서 98년부터 역내 각국의 전기통신망을 개방한다는 통신자유화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유럽은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해서는 사업자간, 국가간 경계를 철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정보통신부, 1995: 431-432).

GII에 대한 EU의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여 세계 시장에서 공동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아울러 EU내 국가간 공동협력을 통해 미국의 EU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EU국가들은 G7과 OECD를 통해 GII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GII 구축과정에서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미국의 독주를 견제코자 하고 있다. GII를 비롯하여 유럽의 정보화전략은 1994년 6월 그리스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담에 제출된 반기만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에 대한 유럽 및 지구촌 정보사회에 대한 권고>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의 요지는 한마디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민간주도, 즉 민영화를 통한 경쟁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정보산업 진흥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도시정보고속도로, 유럽행정기관 네트워크, 학술연구망 등의 구축과 원격학습, 원격의료 등의 추진을 권장하는 10가지 정보화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특히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제시된 정보통신 규제 해제 건의가 EU위원회에서 수용되어 EU 각국은 1998년까지 통신시장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박태건, 1995: 228-233).

이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의 BT(British Telecom), 독일의 DT(Deutsche Telekom), 프랑스의 FT(France Telecom)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간의 협력과 경쟁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유럽내의 통신사업자와 미국, 일본의 통신사업자들간에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3. 日本

일본은 미국의 GII 구상 발표에 가장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1994년 5월에 2010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차세대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한다는 소위 <신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엔고와 무역마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은 바로 미국의 NII 및 GII 전략을 염두에 둔 계획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GII에 대응해 1994년 5월에 몰디브의 말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전기통신연합체(APT)와 유엔무역개발협의(UNCTAD)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전역을 관통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자는 <아시아정보통신기반>(Asia Information Infrastructure: AII)구상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이를 위해 AII 구축 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AII는 미국과 유럽의 GII 추진에 따른 일본의 약화된 입지를 만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박태경, 1995: 238).

한편 일본의 정보통신업자를 비롯한 경제계도 GII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 정보통신회사의 인수·합병, 자본투자, 거대 정보통신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민간차원에서 일본에서 터어키까지 아시아를 관통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1994년 11월 북경에서 발표되었다. <실크로드 21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는 동서교류를 위한 사회자본 정비, 시장경제화의 추진, 산업의 진흥, 환경 보존대책 등을 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한국-중국-중앙아시아-이란-터키를 연결하는 광섬유통신망 <실크로드 네트 21>, 즉 실크로드판 정보수퍼하이웨이 구축을 AII 실현전략 사업화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보통신부, 1995: 382).

4. 第3世界와 韓國의 超高速情報通信網 計劃

이들 선진국들의 뒤를 쫓아 일부 신흥공업국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싱가풀은 2000년까지 일반가정에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IT-2000계획>을 추진중이며 중국도 2000년까지 70억 달러를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까지 45조 2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신망 구축사업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 그룹을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산업체 및 일반국민을 위해 민간이 투자하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나뉘어지고 여기에 <선도시험망> 사업이 더해진다. 세 부문의 사업은 모두 3단계로 구성돼 1단계로 97년까지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 155-622 Mbps급 전송로가 구축돼 부분적인 원격진료, 원격교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2단계로 2002년까지 이미 구축된 전송로를 2.5-수십Gbps급으로 확장하고 ATM 중심으로 교환망을 구축해 LAN간 155 Mbps 이상의 초고속 접속서비스와 더불어 전국을 연결

하는 원격진료,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까지 수십Gbps-수T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돼 개인휴대통신(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PCS)이 보편화되고 전국 어디서나 교육, 의료, 교통, 행정, 정보제공 등 각종 응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GDP 3.22%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94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화추진위를 발족하고, 95년 4월 응용기술개발사업 187개를 선정했으며, 95년 7월 선도시험망의 하나로 서울 광화문 전화국과 대전 유성 전화국간 2.5 Gbps급 광케이블 전송망을 구축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해 95년 8월 공포했다(초고속정보통신 편집실, 1995).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보통신기반 정비에 대해 제3세계 국가들이 통일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실 제3세계내에는 정보통신기반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전화서비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GII 구축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방식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남미 국가들은 개방화와 민영화를 통하여 미국의 자본과 기술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 미국의 GII 전략에 종속적으로 움직여갈 전망이다. 유럽의 낙후지역인 동유럽의 경우 대부분 정보통신을 국가나 공영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나 서유럽 국가들의 개방화정책에 따라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보통신기술과 자본의 영향력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제3세계 제국들은 대부분 전화와 같은 기본통신시설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아 GII에 앞서 기본통신설비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결국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풀, 아세안 국가와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상호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여 GII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GII 전략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GII와 일본의 AII 등 선진국 주도의 세계정보통신기반 정비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선진국과 중진국들간에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역내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우리나라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이 바로 아태 정보통신기반(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이다.

APII는 1994년 8월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어 그해 11월에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회 APEC 정상회담에서 APII 구축을 위한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1995년에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아태 지역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협력체제로 부상했다.

APEC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1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가 1995년 5월 29, 30일 이틀간 서울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국들간에 APII 구축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은 후 APII 구축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을 천명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에서 제시된 5대 목표와 10대 원칙은 <표 2>와 같다(한국전산원, 1994).

표에서 보듯이 서울선언문의 5대 목표와 10대 원칙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주장이 적절히 융합되어 있다. 특히 10대 원칙의 6항과 9항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존중하는 가운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정에서는 기술과 자본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에 다분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들의 전략에 따라 좌우될 개연성이

<표 2> 서울선언문 5대 목표 10대 원칙

5대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접속되고 연동가능한 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충 2. 정보통신기반구조 발전을 위한 회원 경제체제간 기술협력의 장려 3.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의 촉진 4.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5. APII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환경 조성의 장려
10대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경제체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장려 2. 경쟁주도적 환경의 증진 3.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4.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5. 회원경제체간 협력의 강화 6.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정보통신 기반구조 격차의 해소 7. 국내법률과 규제에 상응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8. 공중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9.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 10.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IV. GII의 國際的 含意

GII의 주창자들은 GII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3세계까지 동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GII가 전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II를 위한 기술수준과 추진 상황도 다르고 특히 국가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각국의 힘이 서로 다르고 GII 추진의도와 이해관계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GII가 지닌 합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기술과 사회변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선진국이 GII를 추진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망해볼 경우에라야 GII가 제3세계에 미칠 영향의 실체를 비로소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技術과 社會變動의 關係

GII의 국제적 합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기술 혹은 정보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인 정보화사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면 2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기술이 기존의 지배질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론이다. 이를 간략히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낙관론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론은 벨(Bell)에서 시작된다. 벨(Bell, 1973)은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 즉 정보화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화양식(economizing mode)보다 公共善을 우선시하는 사회화양식(sociologizing mode)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며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본격적으로 이론화하였다.

솔라 풀(Sola Pool, 1983)은 벨의 주장을 언론 분야에서 전개해 새로운 전자기술이 언론자유의 신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리클라이더(Licklider)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정보기술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개입을 확대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강

정인, 1995).

정보기술에 대한 낙관론의 결정판은 토플러(Toffler, 1980)다.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변동을 제2의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토플러는 정보기술이 인류의 삶을 물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정치, 문화, 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삶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재택근무 등으로 가정의 개념과 노동의 성격이 달라지고 산업사회 시대를 특징짓던 중앙집중화, 획일화도 붕괴돼 민족국가와 기업들도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10대 조류를 제시한 네이스비트(Naisbitt, 1982)의 주장은 더욱 극적이다. 그는 “컴퓨터는 순식간에 [위계서열의] 피라미드를 부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경영체계가 필요했다. 이제는 컴퓨터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수평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p. 282)고 주장한다. 즉 정보기술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낙관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가장 최근에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는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차이에 대해 산업사회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물질, 즉 ‘아톰’을 교환하는 것인데 반해 정보화사회 교역의 핵심은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화하여 광속으로 전달되는 ‘비트’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디지털 세상이 사람들의 접근성, 이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크게 증대시켜 오늘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호언한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진국과 제3세계,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 심화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한다. 왜냐하면 신세대는 구세대보다 디지털에 훨씬 친숙하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사회의 각종 편의를 자연스럽게 누림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대간 문화단절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낙관론의 스펙트럼은 다채롭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이상향적인 기술결정론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술이 자연발생적이고 자율적이며, 가치중립적이고, 중심적인(central) 것으로서 사회의 여타 부문의 발전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줄코, 1987: 40). 이러한 가정을 정보기술에 적용시키면 뉴미디어의 쌍방적 속성은 사회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 유통은 낙후된 사회에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전파해 이 지역을 급속히 발전시킨다. 그래서 전신 기술이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술지상주의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Neuman, 1991: 16).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즉각 의사소통을 하여 해결하면 싸울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자동화는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도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며,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은 개개인의 기호를 충족시켜 개성을 존중하게 된다고 본다.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사회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지위와 성취의 척도가 물질적 부의 축적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벨의 사회화양식은 바로 이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모든 동인은 기술이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보기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은 반드시 이상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즉 정보화사회는 정보기술의 본질에 의해 오늘날 사회의 많은 모순들이 해결돼 훨씬 살기 좋은 사회로 된다는 유토피아주의(Utopianism)가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비판론

이와달리 비판론자들은 기술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기술의 힘은 그 사회적 이용형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기술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발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Schiller, 1981). 이들은 대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정보기술이 오히려 기존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론을 전개하고 있다.

쉴러(Schiller, 1984)나 모스코(Mosco, 1989)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기술이 가치중립적이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된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기술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은 기존의 지배집단인 자본가 집단이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하며 그 이용 방식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은 노동과 정의 분석을 통해 정보기술이 노동의 탈숙련화,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비판론을 정리해 영(Young, 1987)은 “기술이 불평등을 해소하리라는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현실 사회를 무시한 환상”이라고 표현했다.

웹스터와 로빈스(Webster & Robins, 1986)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을 통한 기존질서의 강화를 막기 위해 19세기에 전개된 기계파괴운동(Luddite)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은 기술이란 특정한 사회관계 구조의 반영이라고 전제한 뒤 기계파괴운동을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정보기술 역시 기존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반영해 이를 더욱 고착시킬 뿐이므로 기계파괴운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3) 기존 논의의 문제점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1차적 효용인 기술적 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적 효용이란 기술 그 자체가 인간 개개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편리함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의 지적대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매스 미디어와 달리 방송 프로그램을 편리할 때 비동시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1차적 효용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서 나온다. 1차적 효용의 측면에서 기술은 분명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기술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2차적 효용인 사회적 효용, 즉 사회구조 내지 사회질서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론자들에게 기존의 사회구조는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기술은 이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고착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2차적 효용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들은 2차적 효용의 측면을 완전히 간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1차적 효용을 토대로 한 2차적 효용은 ‘자연히’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의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편리한 것임을 입증하면 당연히 그 사회적 이용도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기술 그 자체가 저절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기술이 특정의 사회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내용은 기술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본질적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배경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낙관론과 비판론의 일정한 접합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노이만

(Neuman, 1991)은 기술력과 사회구조는 서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상호작용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 슬랙(Slack, 1984)은 알튀세(Althusser)의 입장에서 기술이 사회구조의 일부이면서 복합적인 사회구성체 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는半자율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접근법도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근거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II에 대한 논의들은 비판론이나 혹은 슬랙이나 노이만식의 절충적 입장은 거의 없이 대부분 낙관론의 입장에서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GII가 지닌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실제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나친推斷에 입각하고 있어 올바른 설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GII의 기술적 효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그 사회적 효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GII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2. GII의 政治經濟的 背景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낙관론자나 비판론자나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 “현재 정보와 관련된 산업은 세계 경제의 투자와 성장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과거 철강이나 철도, 자동차 등이 맡았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McChesney, 1995: 4)는 것이다. 현재 통신, 정보, 전자, 컴퓨터 및 이에 이용되는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1993년 5.000억 달러를 넘어 2000년에는 1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NIKKEI Electronics> 1993. 3. 15).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낙관론자들은 사회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기술 그 자체의 본질상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데 반해 비판론자들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야위라(Jayaweera)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메카니즘은 항상적인 이윤을 저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9세기 후반 대량생산 체제로 돌입했으며, 20세기 중반에는 자동조립 공정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로 당시의 위기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윤율 하락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속성까지 바꿀 수는 없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맞게 된 새로운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정보의 상품화가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다(Jayaweera, 1986).

따라서 정보기술은, 쉴러(Schiller)에 의하면, 그 자체가 상품이면서 동시

에 새로운 시장창출과 생산의 수단으로서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의 경제위기 탈출의 방안 또는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의 수단이며(Schiller, 1984) 자본주의 기업은 정보화를 기치로 시장에서 막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를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2중, 3중의 수익을 누린다는 것이다(Schiller, 1991).

오늘날 정보기술을 통한 이윤추구의 핵심 주체는 주로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첨단 정보기술의 개발에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제 정보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국제 간 정보통신(Trans-border Data Flow: TDF)은 다국적기업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활동할 수 있는 신경망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첨단 통신망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노동분업까지 가능하게 되었다(Jayaweera, 1986). 개발도상국들에 분산된 공장에서 한 부품 또는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해 이를 다른 곳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새로운 국제분업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착취하면서 선진국내 노동자들의 저항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은 다국적기업 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맥체니(McChesney, 1995: 5)는 다국적기업의 강화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능력 약화를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첫째가 는 중요한 경향으로 꼽기도 한다.

GII는 바로 이같은 자본주의 위기극복의 발판인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성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GII의 추진 논리 역시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GII는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기존의 정보기술보다 훨씬 첨예하게 대립하며, 또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과의 결탁이 어느 경우보다 강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Vincent, 1995: 352).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정보통신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정치, 경제 질서하에서 정보통신 기반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21세기 정보경제시대의 주도권 확보에 가장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계가 이념경쟁시대에서 경제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전후 자본주의 진영의 국제경제질서를 통제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등장하였다.

WTO체제는 그동안 GATT체제하에서 제외되어 왔던 농산물과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둘으로써 세계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경제전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Vincent, 1995: 367-368).

이러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산업경쟁력의 원천이자 세계경제질서의 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산업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며,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제조업이 아니라 정보산업의 규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개방과 세계화의 경제구조하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차원이자 핵심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GII 구축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정보기술은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1994년 9월 미국이 발표한 <1994년 최신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Update 1994)에 의하면 정보기술에 관한 한 미국의 국제경쟁력은 향후 5년 내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박태건, 1995: 216-219).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간 인터페이스-시각화기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네트워크-통신, 휴대용 통신장치-시스템 등 6개 분야의 25개 세부항목에서 18개 항목이 사실상 절대우위를 지키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으나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7개였으며 경쟁력이 없거나 ‘이미 패배’ 한 분야는 하나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고어가 발표한 GII 구축 제안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질서하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21세기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라 하겠다. 즉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정보상품면에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정보산업의 세계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세계통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미국이 GII의 전제로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전면 개방과 경쟁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된다(Vincent, 1995). 사실 미국은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먼저 미국내 통신산업을 독점하던 AT&T를 1985년 분해해 전통적으로 자연독점 성격을 띠던 이 분야의 자유 경쟁과 사영화를 선도했으며, 또 GATT체제를 WTO체제로 바꾸면서 GATT에서 제외되었던 정보-서비스 산업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는 1996년 2월 통신법 개정을 통해 통신관련 업종의 전면 개방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어가 GII를 주창하면서 GII가 “모든 인류가 서로 연계돼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트하는 연결망”으로서 전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

라고 선전하면서도 이를 위해 사영화와 자유경쟁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빼먹지 않는 것이다(Vincent, 1995: 352-353).

그러나 GII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면 클수록 미국 주도에 대한 다른 선진국들의 견제도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GII 구축이 G7간의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들간의 이해다툼으로 아직까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브뤼셀 회담에서도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이나 미국이 GII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위성사업(LEO)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정보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자국문화보호가 정책상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저궤도위성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것이 GII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조기에 추진하자고 주장하였으나 EU 국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독자적인 사업임을 내세워 반대하였다(박태경, 1995). EU 국가들이 TEN을 중심으로 몽치고, 일본이 AII 구축을 제안하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독주를 막고 자신들이 속한 경제권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인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GII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은 주로 GII의 규칙 제정을 둘러싼 것이다. GII 자체가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다수가 승복하는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GII의 규칙 가운데 첨예한 부분이 기술의 국제 표준화 문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가 공동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표준화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공통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활동”이다(이정원, 1995: 114). 그러나 실제에서 표준화는 그보다 훨씬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표준은 경제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일단 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부합하지 않는 업자는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후발기업은 이 표준에 따라 새로이 개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표준의 결정이 결코 기술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국가마다 자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으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는 것이다(Mulgan, 1991). ISDN의 표준화를 놓고, 가장 먼저 개발된 일본의 INS가 표준화에서 탈락하고 또 한 HDTV에서도 자국의 아날로그 방식이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일본은 해당분야의 가장 앞선 기술 보유국 자리에서 밀려나 새로운 표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 한 예이다(졸고, 1993: 75-76 참조). 앞

으로 새로 개발될 기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 가운데 상당수도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GII 구축은 표준화를 둘러싼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기술 표준화에 비하면 GII의 운용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Schwartau, 1994: 26). 네그로폰테는 현재의 국가 단위 저작권은 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으며 예술가의 작품이나 GII 관련 법률은 한 나라가 아닌 지구 상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일보> 1996. 1. 15). 그의 주장은 정보나 인류의 지적 재산 역시 상품일 뿐이라는 철저한 상업주의적 발상으로서 그러한 상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자신의 나라인 미국이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GII가 정보화社会의 국제적 집적체임에도 불구하고 GII를 둘러싼 국가간 다툼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우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GII의 기반이 되는 광섬유 케이블은 고사하고 전화조차 거의 가설되어 있지 않다(Masmoudi, 1995). 이러다 보니 이들 국가들은 GII를 둘러싼 국가간 다툼에 끼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사정이 보다 나은 제3 세계 국가들도 표준화 전쟁에 내놓을 만한 정보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싸움판에 개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선진국간의 이해다툼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GII를 위해 제3세계가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전화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도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을 감안하면(Dizard, 1982) 제3세계의 GII 기반을 닦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화시설의 생산은 물론이고 이를 독자적으로 가설할 능력조차 없는 대부분의 제3세계 입장에서 GII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제품 형태(turn-key)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수밖에 없다(Sussman, 1988). 제3세계 국가들은 GII 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산업을 지배하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상품 판매시장으로 바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국은 GII의 구축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3세계가 자체 조달하든 선진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든 막대한 금액을 선진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GII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도 현실의 GII는 제3세계를 배제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국가간 이해다툼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GII가 세계 공

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GII는 국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불평등 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GII는 제3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도 미국 등 선진국 중심체제로의 편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3. GII와 제3세계의 변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GII지만 제3세계에 미치는 그 파급 현상들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추구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GII의 단계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몇가지 면에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私營化와 脫規制

미국은 오랜 동안 정보의 자유유통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정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철저히 상업적 측면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제 정보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은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의 우위를 지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세계의 정보를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것이었다(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85: para 41; Vincent, 1995: 355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정보관련 산업에 대해 각종 규제조치를 통해 자유경쟁을 억제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85년 약 1세기 동안 미국 통신분야를 독점해온 AT&T를 분리하고, 1996년 2월 통신법을 대폭 개정해 정보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정보산업에 대한 조치만은 아니었다. 이런 자유화정책은 설러의 지적처럼 유럽 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에 속하던 전기통신사업을 私企業化시킴으로써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Schiller, 1981).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국제경제기관들을

통해 이러한 압력을 행사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의 정책을 수용해 제3세계에 차관을 제공할 때면 시장의 완전개방과 정보산업의 사영화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GATT 체제를 WTO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농산물 및 서비스까지 개방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BT, 일본의 NTT 및 프랑스의 FT 등이 사영화되고 경쟁업체의 설립이 허가되는 등 선진국에서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공사체제로 운영하던 정보통신 사업을 사기업에도 공개하게 되었다(Schiller & Fregoso, 1993). 우리나라도 체신부에서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던 전화사업이 공사 형태로 바뀐데 이어 다시 사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전화에 이어 장거리전화에도 독점을 폐지하고 경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적 추세의 추종 결과다.

사영화와 탈규제는 이제 GII의 기본적 전제로 등장하고 있다. 1994년 GII를 제안하면서 고어는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이 정보통신사업을 사영화해 경쟁체제의 이점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도 사영화와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사영화 추세의 확산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Vincent, 1995: 353-354).

고어가 대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논리는 사영화와 자유경쟁을 통해 주요 생산자 및 공급자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세계 차원의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Mowlana, 1993: 163). GII는 정보가 핵심 상품이 되는 국제 정보화사회의 기간망이기 때문에 전세계 차원의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GII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사영화와 자유경쟁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곧 GII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할 뿐이다. 바로 제3세계의 딜레머인 것이다.

(2) 공공영역의 상업화와 정보격차

정보를 상품화하는 정보화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영역의 상업화다. 전통적으로 도서관, 교육, 정부 통계자료 등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정보라는 새로운 동인에 의한 경제적 팽창은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상품화라는 경향을 심화 했고 특히 공공 영역으로서의 정보 영역인 공공 도서관, 정부의 정보 역할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Schiller, 1989).

이러한 변화 역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온라인망을 설치에 정보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했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있던 공공도서관의 정보도 컴퓨터사용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Schiller & Schiller, 1988).

정부의 통계자료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간행물을 통해 공개되었던 정부 통계자료들은 이제 정보제공 회사의 개입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입수할 수 있고, 정보의 비트 단위로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Pay-per Society” (Mosco, 1989)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영역의 상업화는 제3세계에까지 파장을 미친다. 만일 GII가 이루어진다면 GII를 통한 선진국들의 공공 정보 이용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3세계의 공공 정보 역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부터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공영역을 상업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원한다면 그 조건으로 의료,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삭감하라고 지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Vincent, 1995: 357). 자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GII가 구축되면 제3세계 공공영역의 상업화가 훨씬 빨라질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정보의 상품화, 공공영역의 상업화로 과거 무료이던 정보의 이용에 비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보의 공공재 성격은 갈수록 약화된다. “정보의 이용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접근의 원칙이 평등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바뀐 것이다”(Schiller & Schiller, 1988: 154). 그 결과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정보산업 영역인 신문, 잡지에 있어서도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신문, 잡지의 구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처럼(강명구, 1995: 192-193). 이제 이러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과거 무료이던 정보가 유료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라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정보가 경제질서의 중심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은 부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된다. 정보가 상품으로 전환되면 정보의 가격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부와 관련된 정보일수록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따라서 이런 정보일수록 부유한 사람들만이 접근해 그들의 부를 더욱 증대시키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다(Hayes & Miller, 1994).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과 부의 부익부 빈익빈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대두와 함께 다양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가 일단 보장된다고 해도,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보다 비싸고 성능이 좋은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조직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 활용함으로

써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설득적이 된다(강정인, 1995: 176). 즉 가진 자들만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정보들은 다시 가진 자들의 부를 더욱 증대시키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것이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은 GII가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뉴미디어 관련 잡지 <온라인 매거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82% 가 북미와 서유럽의 백인이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간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한 국가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북미나 서유럽 사용자는 주로 소득이 높은 중산층이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1996. 2. 6). 만일 제3세계에 GII망이 완비된다고 해도 주수혜자가 제3세계 내 상위계층이 되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히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제강화

정보기술이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대로 통제 강화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는 크게 보아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로 나뉠 수 있다.

정보기술이 경제적 통제의 강화에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로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은 노동과정에 대한 정보기술의 적용을 분석한 결과 이것들이 소유주 등 지배계급의 착취수단으로 사용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이후 전문직의 노동과정을 분석한 웹스터와 로빈스(Webster & Robins, 1986), 사무자동화가 노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클레멘트(Clement, 1988) 등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특히 멀건(Mulgan, 1991)은 20세기 후반들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통제의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인류에게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사회체제는 이에 부합하는 보다 복잡한 통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은 바로 이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p. 1-9).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 나라 내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GII가 구축되면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한 TDF는 제3세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례로서 TDF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은 제3세계 각국에 분공장을 차려놓고 철저한 분업을 실시. 현지에서는 전체 생산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주어진 부분에 대한 생산만을 담

당한다. 이는 또한 분공장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해 다국적기업은 TDF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임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취득해 임금이 조금이라도 낮은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한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노동집약적 산업조차 다국적기업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Jayaweera, 1986). GII는 바로 이러한 TDF를 보다 원활하게 또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제3세계에 대한 노동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GII가 제3세계 민중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노동통제 수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초점생산을 위해 선진국이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이란 설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정보기술이 정치적 자유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보기술이 대중의 정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에 의한 대중 조작의 기회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다. 강정인(1995: 160)은 만일 첨단의 정보기술을 소수의 엘리트가 장악하게 된다면 중앙의 컴퓨터를 이용해 시민들의 가정을 탐색하고 개개인의 쇼핑, 은행거래, 사생활 관련 정보들을 취득해 이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이 복잡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통신전자장치와 그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정보의 취득도 용이해지지만 전제정치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중국은 1996년 들어 인터넷을 통한 합법적 통신이라도 그 내용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규를 신설했다(<한국일보> 1996. 2. 6).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GII를 통한 정보흐름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GII를 아예 민중의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4. 남북 경제적 격차의 심화

GII 구축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관련 장비판매 및 망 운영으로부터 나온다. 빈센트(Vincent, 1995)의 지적처럼 이 면에서 GII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일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애플 컴퓨터사 사장 스컬리(Sculley)에 따르면 GII 시스템 구축에는 약 3조 5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 15대 텔레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 가운데 9개가 미국 기업이다. 또 세계 10대 텔레커뮤니

케이션 장비 사업자 가운데는 미국 기업이 3개, 유럽 기업이 5개, 일본 기업이 2개로서 모두 이들 국가의 몫인 것이다. 1992년 현재 1,140억 달러인 세계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의 10대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이 5개, 일본 기업이 3개, 유럽 기업이 2개이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의 80%, 메인 프레임 시장의 64%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II 구축은 곧 선진국 정보통신관련 다국적기업의 방대한 제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Schiller and Fregoso, 1993: 221-222).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여태까지 첨단 정보 기자재를 다국적기업에 의한 턴키 방식으로 들여왔듯이(Sussman, 1988: 281) GII 관련 기자재도 그럴 수밖에 없고, 재원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들은 차관을 들여 GII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다시 선진국으로 회수될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 표준이 되어버린 PC의 운영체계인 DOS나 WINDOWS는 모두 미국 기업의 상품일 뿐 아니라 그밖의 주요한 각종 PC 소프트웨어도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기업의 제품이며, GII 소프트웨어의 수익도 선진국의 몫이 될 것은 확실한 것이다.

GII의 한 형태인 인터넷의 웹 검색프로그램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비게이터(navigator)가 1996년 2월부터 유료화되었다(〈한국일보〉 1996. 2. 13). 내비게이터는 이전까지 무료였다.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경쟁을 벌일 때는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인터넷 사용환경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보이자 유료화한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인터넷의 많은 부분이 무료로 이용되지만 이는 씨뿌리기 단계일 뿐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 그 유용성과 경제성이 널리 인정받게 되면 더 이상 무료로 있지 않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Sahraoui et al, 1995: 7).

인터넷은 앞으로 정보교류의 장에서 상업적 거래의 장으로 아예 주성격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네그로폰테는 현재 인터넷의 수입은 가입료, 광고료,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수수료의 순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상거래 수수료, 광고료, 가입료의 순으로 뒤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중앙일보〉 1996. 1. 15). 물론 이때의 국제간 상거래도 선진국 판매-제3세계 구매의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GII 구축에 따른 이익은 선진국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제3세계의 경제개발이 빨라지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것이 GII 주창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GII의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실현되기는몹시 어려워 보인다.

우선 GII에서 유통될 정보의 상품화의 문제다. GII는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이면서 또한 국제적 거래의 수단이다. 그런데 비록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1982년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미국이 55.6%, 유럽공동체가 25.7%를 차지하는 등 모두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최두진, 1988: 38). 정보의 상품화의 과실 역시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3세계는 학문, 과학, 기술, 문화 등에서 상품화할 정보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광물의 매장 현황 등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의 원자료는 꽤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3세계는 이러한 정보원자료를 상품화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물질적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원자재도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 가공 처리되어 다시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Schiller, 1981: 5).

GII를 통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 역시 서비스 제공자가 선진국에 몰려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역시 이런 서비스의 판매에 따른 경제적 수혜자는 선진국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제3세계가 GII로부터 경제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GII가 정보의 공개장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공개될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노동 분업은 이에 대한 참고가 된다.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국경없는 정보의 흐름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 정보가 현지 국가의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보망 속의 정보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서 제3세계 각국의 공장들은 완성품의 전생산과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단순한 분공장으로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처럼(Jayaweera, 1986) 이윤추구를 절대 목표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들의 보호자인 선진국 정부가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진국들이 지적소유권 보호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3세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정보화는 해당 국가의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맞춰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ASEAN 국가들의 정보화를 분석한 써스만(Sussman, 1988)에 의하면 이들 국가의 정보화는 식민지 시절부터 있어온 선진국과의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정보망의 주요 이용자가 외국의 다국적기업인 테다가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망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전화보급률이 100인당 몇 대도 안되는 이들 나라에서 최첨단 디지털 전화망을 도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승관의 지적처럼 “제3

세계의 첨단 정보부문에 대한 성급한 몰입은 저급한 발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첨단 정보부문과의 불균등 발전을 유발. 소수 엘리트계층과 국제자본의 사치적, 독점적 정보수요만을 충족시켜 자립적 사회경제 체제의 구축 전망을 도리어 흐리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은 것이다”(박승관, 1991: 61). GII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GII는 철저히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이며 그 결과는 남북간 경제격차의 증폭과 제3세계의 선진국 종속 심화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GII를 이용해 선진국의 앞선 노하우를 익혀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전망의 모델로 제시된다. 그러나 한국도 일반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국가별 정보화 추진정도를 나타내는 정보화지수가 이를 보여준다. 1986년에서 1993년 사이 한국의 정보화지수는 58에서 134로 2.31배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일본은 269에서 657로 2.44배, 독일은 237에서 636으로 2.68배, 영국은 273에서 664로 2.43배 늘었다. 절대치나 상승속도에 있어서나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만이 442에서 937로 2.12배 늘어 상승속도에 있어서 한국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절대적 우위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종환, 1995: 70). 제3세계의 우등생이라고 할 한국이 이 정도이니 다른 국가들의 형편은 더욱 열악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GII는 원활한 국제적 정보교류를 통하여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낙관론과는 달리 현존의 정보종속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V. 文化的 從屬

GII가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문화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영화, 텔레비전, 광고, 잡지 등 이전까지의 문화전달 매체는 주로 필름 혹은 종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 네그로폰테의 표현을 빌면 아톰의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 유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국경에서의 검열이 가능했다. 그러나 GII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영상매체들을 모두 통신망을 통해 가정으로 즉각 광속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졸고, 1993: 69). 이렇게 볼 때 GII는 이전까지의 문화전달 매체보다 문화침투의 속도와 범위가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적 파급효과 역시 과거의 무엇에

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와 문화산업의 결합 또한 GII의 문화적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GII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규제철폐로 인해 정보관련 다국적기업은 과거와 달리 다음 세기의 최대산업이 될 것이 확실한 정보통신 분야로 적극 진출을 도모하여 컴퓨터, 전화, 텔레비전, 신문, 영화, 오락 등 정보와 문화를 함께 취급하며 동시에 전달망까지 장악하는 정보-문화복합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Schiller, 1993: 48-49). 아동용 만화영화를 만드는 오락기업 디즈니사가 미국의 네트워크 TV회사인 ABC를 흡수하고 타임-워너사는 최근 CNN과 합병하여 세계적 케이블 뉴스와 시사지, 출판, 영화 등 정보와 문화 관련 사업을 두루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문화다국적기업은 자금력이나 규모, 내용면에서 과거의 어떤 문화산업체보다도 커다란 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훨씬 강력한 다국적 정보-문화기업이 과거 어느 매체보다도 신속, 편리한 문화전달망인 GII를 통해 제공할 문화상품들의 영향력을 가공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3세계는 1970년대부터 선진국의 영화, 텔레비전, 광고, 잡지 등에 의한 문화적 종속현상을 우려했지만 날로 거대화하는 정보-문화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GII는 이러한 문화적 종속을 훨씬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GII에 따른 문화적 종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 중심적 가치체계의 일반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보-문화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은 선진국 편향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디지털화돼 GII를 거친다고 해서 속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GII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선진국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선진국 가치관, 선진국의 문화양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3세계에 유포될 것을 의미한다(졸고, 1993: 69).

일부에서는 제3세계에서 GII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 등 전통적 문화전달 매체보다 영향력이 광범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이 있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 대중이 모두 GII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제3세계에서 GII를 이용하는 층은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앙집중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엘리트층에 침투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 전반에 침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Hamelink, 1984).

한편 GII를 통해 유통될 정보의 질도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GII의 주요 정보공급원인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고급정

보를 유통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계층에 수용될 수 있는 감각적인 오락물들을 대폭 유통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GII는 제3세계의 사회, 경제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사회를 자극적인 오락에 빠져들게 하는 문화적 타락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GII의 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18개월 동안 뉴스그룹에 올라있는 자료 91만 7,410건 중에서 85.5%가 포르노물이였다는 보고서가 있듯이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김형석, 1996: 239).

제3세계는 정보화사회 이전부터 심각한 문화적 종속의 문제로 인하여 1970년 이후부터 줄기차게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을 주장해 왔으나 GII는 이러한 문화적 종속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파생될 많은 문제들은 GII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치적,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3세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짐으로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인다.

VI. 第3世界의 딜레마

1970년대 들어 신국제정보질서(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NWICO) 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는 이에 적극 동조했다. 제3세계 국가들은 각종 국제회의와 특히 UNESCO를 통해 선진국들의 정보독점 현상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불평등의 시정과 정보의 균형잡힌 유통을 요구했다. 제3세계는 마침내 맥브라이드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입장의 상당 부분을 UNESCO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도록 했으나(Nordenstreng, 1993)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국가들의 UNESCO 탈퇴 등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선진국의 정보독점과 일방통행적 유통구조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정보기술은 국가간 힘의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기존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Gerbner, Mowlana, and Nordenstreng, 1993: xi)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정보격차가 더욱 벌어진 오늘날 NWICO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찾기 어렵다.

70년대 제3세계가 NWICO를 제기할 때는 소련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다.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에서 미소 양극체제에 편승한 제3세계는 숫적 우위를 앞세운 공세와 소련의 뒷받침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논리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몰락

의 길을 걷기 시작한 소련이 마침내 붕괴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독자적 목소리를 앞세워 선진국과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단극화 체제내로의 편입을 저항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제3세계 모든 국가의 초기의 관심사는 국가발전이다. 특히 경제발전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이다. NWICO는 바로 이런 경제발전의 전제로서 무엇보다 국제간의 균형된 정보의 유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문화적 종속의 극복이 또한 자주(self-reliant)경제의 기본전제가 된다는 각각에서 비롯된 것이다(졸고, 1993).

GII는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3세계에 동시에 가져다 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여 식민예속의 경험과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제3세계 국가는 이제 제2의 산업혁명에 곧바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사회란 역사적 단계를 건너뛰어 넘는 역사적 도약(leap-frogging)을 도모코자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쉽게 획득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며 이때 GII는 그 잠재성만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GII는 전술한 바와 같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오락정보 위주의 정보상품이 후진국으로 일방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수단이며 위계적 매스미디어, 예컨대 TV나 영화와 같은 오락매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정보종속과 문화종속을 심화시키는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3세계의 선택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후진국들에서는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GII의 잠재적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극히 일부의 학자들에 의한 비판을 예외로 하고는 관료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기술결정론적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자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현실은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전화망마저 거의 없으며 정보화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딜레마인 것이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도입, 즉 정보화는 이제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고(Masmoudi, 1995: 2). “마차와 당나귀가 사라질 때까지 고속도로와 공항의 건설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전화 가설률이 100명당 평균 1명 끌인 아프리카 국가들도 GII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Masmoudi, 1995: 6).

이제 이들이 선진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보의 균형잡힌 유

통이나 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오직 GII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배제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재원이 부족한 제3세계의 입장에서 정보화에 드는 비용과 정보관련 기반의 도입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기반이 약한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정보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을 해제한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뛰어들고 자유경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II의 전제인 사영화와 자유경쟁을 엄격히 적용시키지 말 것도 요구하는 정도이다(Masmoudi, 1995). 말하자면 NWICO에 대한 주장은 정보화사회의 논리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로만 끝나버렸고 선진국의 힘의 논리 앞에서 아무런 실효도 없는 구두선이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NWICO를 주장하던 때와 비교해 현재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구조상의 변화는 제3세계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 갔고 GII의 구축과 더불어 이런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VII. 結 論

GII는 세계 경제질서가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세계의 정보기술 수준이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GII를 축으로 한 미국의 경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서유럽 국가들 및 일본 뿐이다. 따라서 GII를 둘러싼 이들 선진국들의 이해다툼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GII의 주창자들은 GII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포함한 전세계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삶을 개선시키면서 남북 격차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II가 추진되는 정치경제적 배경을 고찰해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일방적 선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GII는 21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적 시장 쟁탈전의 일환이며 그 자체가 상품인 것이고 바로 격화되는 세계경제전쟁의 수단에 다름 아니다.

물론 GII의 기반이 되는 첨단 정보기술이 지닌 기술적 잠재성은 인정할 수 있다. 만일 GII가 전세계를 뒤덮는다면 세계 어디에서건 원하는 음성, 화상, 문자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동화상을 통해 모든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상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큰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무료는 아니며 GII의 기술적 가능성과 그것의 사회적 실현 형태는 별개의 문제다. 사라위 등(Sahraoui et al. 1995)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옹호자들이 정보화사회가 장미빛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20세기 초 대량생산 시대로의 진입 당시 대량생산 시대의 옹호자들도 대량생산 시대에 접어들면 장미빛 미래가 도래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제3세계의 근대화, 산업화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오늘날 드러나듯이 남북격차의 심화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대량생산 기술에만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3세계를 서방의 원재료 및 값싼 노동력 제공 시장으로 만든 국제적인 개발 메카니즘, 즉 정치경제적 맥락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즉 기술의 잠재성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보화사회의 옹호자들은 첨단 정보기술로 인해 지식시장의 대기업 독점이 사라지고 소규모 기업과 유연 생산의 새로운 세계 경제체제가 등장할 것이며 (Toffler, 1980; Negroponte, 1995),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공룡같은 다국적기업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명화와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GII의 결과는 분명하다.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지배가 심화되고 있고 이미 기업집중이 정보산업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GII 환경이 정보기술의 기술적 속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에 좌우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지 기술이 기업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이다(McChesney, 1995: 6).

이런 GII의 정치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21세기 세계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제될 경우 제3세계 국가는 미래 세계 경제질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은 정보화를 향해, 그리고 GII를 향해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도 자신들의 도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세계가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GII가 스스로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Sahraoui et al, 1995: 23).

역사적 도약을 도모해야하는 당위를 안고 있으면서 자칫하면 다시 문화종속과 새로운 식민예속의 개연성 속에서 “역사의 짐”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는 제3세계의 딜레마는 세계적 정보화를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3세계의 선택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그렇더라도 GII와 같은 하드웨어나 기술자체 보다 기술의 사회적 이동양식과 그 배경이 되는 정치경제학적인 합의와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될 때 단순한 기술결정론적 낙관론에 입각한 순진한(naive) 판단보

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혜의 모색이 다시금 활성화되어야 할 때라 믿어진다.

参考文獻

장정인

- 1995 “정보사회와 원격 민주주의.” 『계간 사상』 가을호, 150-185.
 김성규
 1995 “범유럽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추진동향.” 『초고속정보통신』 가을호, 62-71.

김종환

- 1995 “국내 멀티미디어산업 동향과 발전방안.” 『초고속정보통신』 겨울호, 70-73.

김형석

- 1996 “인류도덕의 마지막 시험장, 포르노 인터넷.” 『말』 2월호, 238-239.
 박승관

- 1991 “제3세계 정보부문의 탈구현상.” 『신문연구소학보』 28집, 43-64.
 박태경

- 1995 『앨고어 정보고속도로』. 서울: 길벗.

이성재

- 1995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현황.”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11월호, 24-31.

이인규·이희규

- 1995 『멀티미디어로 가는 21세기』. 서울: 인플리오.

이재용

- 1995 “ATM 기술의 현황과 전망.” 『초고속정보통신』 가을호, 44-47.

이정원

- 1995 “전기통신 표준화기구 활동과 동향(1).”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11월호, 111-116.

정보통신부

- 1995 『1995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 편집실

-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개요 및 전망.” 『초고속정보통신』 창간호, 12-17.

최두진

- 1988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추광영

- 1987 “통신기술의 혁명과 국제커뮤니케이션.” 『신문연구소학보』 24집, 31-48.

- 1993 “ISDN의 국제화 추세와 전망.” 『신문연구소학보』 30집, 41-84.

한국전산원

1994 『APII의 목표와 전망: 서울선언과 우리의 역할』. 서울: 한국전산원.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raverman, Harry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Clement, Andrew

1988 "Office Automation and the Technical Control of Information Workers," In V. Mosco and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217-246.

Dizard, Wilson P.

1982 *The Coming Information Age*, New York: Longman.

Gerbner, George, Hamid Mowlana, and Kaarle Nordenstreng (Eds.)

1993 *The Global Media Debate: Its Rise, Fall, and Renewal*, Norwood, NJ: Ablex.

Hamelink, Cees J.

1984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Information Industry," In G. Gerbner and M. Siebert (Eds.) *World Communications*, New York: Longman, pp. 202-209.

Hayes, Sharon and Laura Miller

1994 "Informed Control: Dun & Bradstreet and the 'Information Society,'" *Media, Culture & Society* 16: 117-140.

IITF

1994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Cooperation*, Washington D.C.: IITF.

Jayaweera, Neville

1986 "The Third World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In J. Becker, G. Hedebo and L. Paldan (Eds.) *Communication and Domination: Essays to Honor Herbert I. Schiller*, Norwood, NJ: Ablex, pp. 30-44.

Mansell, Robin

1993 "From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o the Network Economy: Realigning the Control Structure," In J. Wasko, V. Mosco and M. Pendakur (Eds.) *Illuminating the Blindspots: Essays Honoring Dallas W. Smythe*, Norwood, NJ: Ablex, pp. 181-195.

Masmoudi, Mustapha

1995 "Africa Facing the Information Highway," Presented at the 7th McBride Round Table in Tunisia.

McChesney, Robert W.

- 1996 "The Politics of the Internet in Histor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46(1): 1-11.
- Mosco, Vincent
 1989 *The Pay-per society: Computers and Communi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Norwood, NJ: Ablex.
- 1993 "Free Trade in Communication: Building a World Business Order," In K. Nordenstreng and H. I. Schiller (Eds.) *Beyon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1990s*, Norwood, NJ: Ablex, pp. 193-209.
- Mowlana, Hamid
 1993 "From Technology to Culture," In G. Gerbner, H. Mowlana and K. Nordenstreng (Eds.) *The Global Media Debate: Its Rise, Fall, and Renewal*, Norwood, NJ: Ablex, pp. 161-166.
- Mulgan, Geoff
 1991 *Communication and Control: Networks and the New Economies of Communicaion*, New York: Guilford Press.
- Naisbitt, John
 1982 *Megatrends*, New York: Warner Books.
- Negroponte, Nicholas
 1995 *Being Digital*, 백육인(역)(1995) 『디지털이다』. 서울: 박영률출판사.
- Neuman, W. Russell
 1991 *The Future of Mass Aud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denstreng, Kaarle
 1993 "The New Information Order and Communication Scholarship: Reflections on a Delicate Relationship," In J. Wasko, V. Mosco and M. Pendakur (Eds.) *Illuminating the Blindspots: Essays Honoring Dallas W. Smythe*, Norwood, NJ: Ablex, pp. 251-273.
- Sahraoui, Sofiane, Abdelkader Daghfous, Khalil Amiri, and Adel Al-Alawi
 1995 "Riding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National IT Strategies in the Third World," Presented at the 7th McBride Round Table in Tunisia.
- Schiller, Dan and Rosa L. Fregoso
 1993 "A Private View of the Digital World," In K. Nordenstreng and H.I. Schiller (Eds.) *Beyon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1990s*, Norwood, NJ: Ablex, pp. 210-234.
- Schiller, Herbert I.
 1981 *Who Knows?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orwood, NJ: Ablex.
 1984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Norwood, NJ: Ablex.
 1989 *Culture, Inc. The Corporate Takeover of Public Expression*, Norwood, NJ: Ablex.

- 1991 "Not Yet the Post-Imperialism Era,"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13-23.
- 1993 "Transnational Media: Creating Consumers Worldwid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7(1): 47-58.
- Schiller, Herbert I. and Anita R. Schiller
1988 "Libraries,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erce," In V. Mosco and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146-166.
- Schwartzau, Winn
1994 *Information Warfare: Chaos on the Electronic Superhighway*, New York: Thunder's Mouth Press.
- Slack, Jennifer
1984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ety*, Norwood, NJ: Ablex.
- Sola Pool, Ithiel de
1983 *Technologies of Freedom*, 원우현(역)(1985)『자유언론의 테크놀러지』, 서울: 전예원.
- Sussman, Gerald
1988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the ASEAN Reg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V. Mosco and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274-296.
-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유재천(역)(1981)『제3의 물결』, 서울: 문화공사.
- Valdes, M. Isabel
1987 "Third World Countries and Conflicting Ideologies of the Information Age," In J. Slack and F. Fejes (Eds.) *The Ideology of the Information Age*, Norwood, NJ: Ablex, pp. 200-219.
- Vincent, Richard C.
1995 "NWICO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Super Highway," In D. Kang (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ublic Interests*, Seoul: Nanam, pp. 333-378.
- Young, T.R.
1987 "Information Ideology and Political Reality: Against Toffler," In J. Slack and F. Fejes (Eds.) *The Ideology of the Information Age*, Norwood, NJ: Ablex, pp. 118-132.